

 재정경제부	보도참고자료		• 풍요로운 나라 함께하는 선진경제 • 고품질 정책으로 신뢰받는 재경부
	보도일시	2006. 12. 28(목) 11:00부터	
생 산 일	2006. 12. 27	생 산 부 서	금융정책국 보험제도과
담당과장	박영춘(02-2150-2370)	담 당 자	이상규(02-2150-2372)

제 목 : 제 1차 「대부업 유관기관협의회」 개최 결과

□ 정부는 2006.12.27(수) 09:30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제1차 「대부업 유관기관협의회*」를 개최하여

- 앞으로 대부업에 대한 관리·감독을 서민보호 차원에서 더욱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,
- 준법 영업하는 대부업자는 최대한 보호하되, 고리채·불법추심·허위광고 등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단속해 나가기로 하였음
- 이를 위해 “장관급 유관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침”과 “부처별 세부추진과제” 등을 확정하였음

* 위원 : 경제부총리, 법무부장관, 행정부장관, 금융감독위원장, 국무조정실장

※ 동 협의회는 부총리주재 관계장관회의(12.19)에서 「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및 사금융 피해방지대책」의 일환으로 효율적인 대부업 관리·감독정책의 추진을 위해 구성·운영기로 결정

□ 대부업 유관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

- 대부업정책의 총괄적인 심의·조정 등을 위해 “장관급 협의회”를 매분기마다 개최하기로 하는 한편,
- 동 협의회 참여기관과 단속기관인 검찰, 경찰 등의 관계자가 참여하는 “실무협의회”(재경부 차관보 주재)를 구성·가동하기로 하였음

- 특히, 실무협의회 산하에 **핵심 3대과제별 T/F***를 설치하고 주관부처가 조속히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기로 하였음

[3대 핵심과제별 T/F 및 주관부처 현황]

- * ① 대부업 관리·감독 지침 수립 등 제도개선 T/F (재경부주관),
- ② 실태파악 및 상시 관리 체계 T/F (행자부·금감위 공동주관),
- ③ 불법 사금융 단속 T/F (법무부주관)

- 아울러 시·도의 원활한 행정협의·협력강화를 위해 시·도별로도 “**대부업 유관기관 지방협의회**”를 구성·운영키로 함

□ 아울러 07년 중 추진할 부처별 추진과제도 확정하였음

- 우선 관계부처 합동*으로 「**불법 사금융 특별단속**」을 실시
 - 1월은 사전홍보와 더불어 탐문, 광고분석 신고센터 접수 사례 등을 통해 **피해사례**를 수집·분석하고, 이를 토대로 2~3월 기간 동안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

* 검찰, 경찰, 행정자치부, 국세청, 금융감독원

- 재경부는 대부업정책의 총괄부서로서 대부업 관리·감독 지침의 수립, 대부업 이용자 보호강화, 대부업협회의 법정기구화 등 **제도개선 방안**을 마련·추진하고
- 행자부와 금감위는 공동으로 07년 1월부터 대부업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, 상반기까지 대부업에 대한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음
- 아울러 금감위는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규제방안을 마련하는 한편
- 법무부는 검찰, 경찰,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영업 행위 및 탈세 등의 방지를 위한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기로 함

재정경제부 정책홍보관리실장

<참 고>

대부업 유관기관 협의회 구성(안)

